

혈액 수급 비상 말라가고 식어가고 사랑의 온도탑 미지근

광주·전남 혈액 보유량 4.5일분에 그쳐 '관심' 경고등 광주 '사랑의 온도탑' 40억624만원 모금 '79도' 멈춰

광주·전남지역의 나눔의 손길이 줄어들고 있다. 혈액 수급이 '관심' 단계로 떨어져 비상이 걸렸고 광주지역 사랑의 온도탑의 수은주는 제자리 걸음이다.

8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에 따르면 이날 자정 기준 적혈구제제 보유량은 4.5일분으로 '관심' 단계에 진입했다. 지난해에는 6월 16일 4.0일분과 12월 14일 4.5일분을 보유했을 때 위기경보가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혈액관리 위기 수준은 5일분보다 적으면 '관심' 단계이고, 3일분 미만은 '주의', 2일분 미만은 '경계', 1일분 미만은 '심각' 단계로 분류된다.

광주전남혈액원은 방학 시즌인데도 지난 2020년 이후 회사원·공무원 헌혈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부터 헌혈 등 개인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하지 않는 교육부 대입 정책 변경도 고교생 헌혈 감소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매년 광주와 전남 사랑의열매가 설치한 사랑의 온도탑도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광주 사랑의 온도탑은 이날 기준 약 40억 624만원으로 기온은 79도이다. 전국 나눔 온도는 90.9도로 광주는 평균치에 크게 떨어지고 목표액인 50억 7000만원과도 거리가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8억원(85.5도)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저조한 실적이다.

전남 사랑의 온도탑은 8일 기준 목표액 105억 5000만원 중 98억 3326만원을 채우며 93.2도 온도를 기록하며 전국적으로 상위권이다. 다만 2022년에는 1월 10일 118.9%를, 2021년에는 1월 6일 131.2%를 채웠다는 점에서 과거에 비해 모금률이 떨어진다.

이 같은 저조한 나눔 현상은 온도 상승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의 참여가 저조한 데 있다는 것이 사랑의열매 측의 분석이다.

광주 사랑의열매 관계자는 "광주 지역 기업은 건설 분야가 대부분인데 요즘 건설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자금 확보 차원에서 기부를 자제하려는 추세다"며 "지난해보다 건설 분야 기부액이 26억원 가량 줄어든 상황이라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또 "엔데믹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들어왔던 마스크 등 코로나 관련 현물이 줄어든 영향도 있다. 현금 기부는 늘어나고 현물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사랑의 온도탑은 시민들의 참여로 이뤄진 풀뿌리 모금이라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올해도 경기가 어렵지만 광주시민들이 더욱 땀땀 뽀뽀 3주 남은 기간 동안 사랑의 온도를 높여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8일 오전 광주시 남구 송암동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내 혈액냉장고의 혈액보관 선반이 텅 비어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5·18 학살자를 '전 대통령'으로 예우 5·18 부상자회 '이해할 수 없는 처사'

전씨 측근 민정기 옹호 간담회 개최도 '도마 위'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회장이 전두환씨에게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써 논란이 일고 있다.

5·18 피해자 모임인 부상자회가 '전 대통령' 표현을 쓴 것은 상식밖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황일봉 5·18부상자회장은 '9일 오후 4시 서울 자유기업원 열림홀에서 민정기 선생(전두환 전 대통령 비서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연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8일 배포했다.

전씨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법적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5·18 학살의 장본인이다. 이에 따라 호칭 또한 '전 대통령'이 아닌 '씨'로 불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비판이 거세지자 황 회장은 2시간여만에 '전 대통령' 표현을 삭제한 정정 보도자료를 냈다.

'전두환 회고록'과 관련 전씨 호위무사를 자처한 인물들 '선생'이라 칭하고 초청 간담회를 열기로 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민씨는 전씨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전두환 회고록'을 책임 정리한 인물이다.

황 회장은 "민씨는 '전두환 회고록에서 나온 5·18 북한군 침투설은 전씨가 아니라 민씨 자신이 잘못 쓴 것'이라고 발언할 것"이라며 "민씨 발언을 통해 5·18 북한군 침투설을 반박하고 왜곡과 편향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5·18 유족회 관계자는 "5·18 단체의 수장이 전씨 측근을 옹호하는 간담회를 열겠다는 것도 황당한다. 이미 예우를 박탈당한 전씨를 '전 대통령'으로 부른다는 건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황 회장이 황당무계한 행동으로 5·18 전체를 수렁으로 밀어 넣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공영방송 KBS에서 전두환씨의 호칭을 '전 대통령'으로 통일하라는 내부 지침을 내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전두환 추징금 870억 환수 물건너 가나

'추징 3법' 3년째 국회 표류...5월 단체 "시간 끌면 의원들 직무유기"

내란·뇌물수수죄로 전두환씨에 부과된 추징금 2205억원 중 867억원의 환수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냐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5월 29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전두환 추징 3법'이 자동 폐기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전씨에게 부과된 추징금의 국고환수가 확정됐다. 현 제도상 전씨에게 국가가 추징할 수 있는 마지막 금액이다.

전씨의 미납 추징금을 압류하기 위해 검찰이 압류·공매한 경기도 오산시 임야 3필지와 관련, 땅을 관리하던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이 원고 패

소로 확정되면서다.

오산시 임야 공매대금 55억원을 포함해 국가는 전씨에게 총 추징금의 60.6%인 1337억원을 추징했다.

하지만 867억원은 미납 상태다. 전씨가 2021년 11월 사망하면서 추징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를 환수하기 위해 국회에서 지난 2020년 6월 24일 발의한 전두환 추징 3법은 아직 계류 중이다.

추징 3법은 추징금 미납자가 사망해도 상속 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불법 재산을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몰수 대상

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등이다.

5·18 단체 등은 더 늦기 전에 추징 3법 국회통과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초대 5·18부상자회장은 "국회의원들이 진정 나라를 위한다면 추징 3법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시간만 쪼다 법안 폐기로 이어진다면 의원들이 직무유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조진태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미적거리는 사이 전두환은 2021년 추징금을 다 납부하지 않은 채 사망했고, 법안 폐기 기한마저 코앞에 두는 상황이 됐다"며 "정치권은 전두환 추징 3법을 받기만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법을 통과시켜 국회의 책무를 다행히 한다"고 지적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전남 경찰청 7명 총경 승진

경찰청은 8일 광주경찰청 박흥원 감사계장, 전남경찰청 류관승 홍보계장 등 135명을 총경승진 임용예정자로 내정, 발표했다.

광주청에서는 박 감사계장 외에 서현우 교통안전계장, 이범형 정보상황계장이 '경찰의 꽃'인 총경 승진 예정자에 포함됐다.

전남청에선 이광재 경무계장, 문영상 강력계장, 주정재 과학수사대장이 승진 예정자에 이름을 올렸다. 순경 공채 출신인 박 계장은 2013년 경정 승진 후 10년 만에 총경으로 올랐다. 서 계장과 이 계장은 경찰대를 졸업하고 각각 2014년 경정으로 승진했다.

광주·전남경찰청에서 총 7명이 이름을 올려 지난해 6명보다는 한명 늘었지만, '복수직급제' 도입으로 총경 인사폭이 크게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외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방청별 총경 승진자는 서울경찰청이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 본청 23명, 경기남부 10명, 부산·대구 8명, 인천 6명, 경북 5명 이에 비해 광주·전남은 각 3명과 4명이 그쳤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024 갑진년 청룡의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피어나다 남민

NAMWON

남민시